

6. 주요 업종별 통상 이슈 분석 (1) - 개관

올해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업종별 통상 이슈를 살펴보는 시리즈를 마련하였음. 이번 호에는 개관을 싣고 다음 호부터는 철강, 반도체, 자동차 등 업종별로 통상 이슈를 점검하기로 함

□ 배경

세계 경기 둔화로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. 또 한국은 막대한 규모의 무역흑자에 따른 통상 압력이 가시화될 전망

- 세계 경기의 둔화로 각국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움직임

- 세계 경기가 둔화된 98년부터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였으며, 99년에도 경기 회복 전망이 불투명하여¹⁾ 보호주의가 한층 강화될 것임
- 미국은 무역적자의 심화²⁾에 따라 업계의 산업 보호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음(99년도 미국의 국별무역장벽보고서(NTE)작성을 위한 의견 접수 결과 51건 중 20건이 한국 관련임)
- EU도 Euro화의 강세로 무역수지 적자와 실업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

- 한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로 통상 마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
- 한국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98년 400억 달러에 이르렀고, 99년에도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 특히 대미 무역수지는 97년 84억 달러 적자에서 98년에 23억 달러 흑자로 전환되었음
- 98년에는 한국경제가 위기 상태에 있어 통상압력이 심하지 않았으나, 99년에는 경제 회복 조짐에 따라 통상 마찰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

1) 세계경제성장률은 97년 4.1%, 98년 2.2%, 99년 2.1% 전망(Oxford Analytica, 99.1.18)

2) 미국 무역적자는 98년 1,680억 달러였으며, 99년에는 2,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(DRI, WEFA 등). 한편, GDP 대비 무역적자 비율이 1% 증가할 경우 반덤핑, 상계관세 제소가 21건 증가한다는 M.P.Leidy의 연구 결과(IMF Staff Papers, 97.5) 있음

□ 주요 통상 현안과 산업별 영향

반덤핑 규제, 슈퍼 301조 및 수입 개방, 빅딜에 따른 보조금 문제, 신통상의제가 주요 현안으로 등장. 이들 대부분이 철강, 조선, 반도체, 전자 등 주력 업종과 연관

- 99년 주요 통상 이슈로는 반덤핑 규제, 국내 빅딜에 따른 보조금 문제, 슈퍼 301조 및 시장 개방, 신통상의제 등을 들 수 있음

- 반덤핑 규제는 올해 가장 중요한 통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. 이는 금융위기 국가들이 저가 수출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데 기인함
- 국내 빅딜과정에서 부채의 출자 전환 및 조세 감면 등이 WTO 규정상의 금지 보조금³⁾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놓고 시비가 일 가능성 있음
- 슈퍼 301의 부활은 미국의 통상 정책이 공세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임.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개방 압력이 가중될 것임
- 클린턴 미 대통령이 뉴라운드를 제안함에 따라 신통상의제의 포괄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

-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 산업

① 반덤핑 규제: 철강, 조선, 반도체

- 철강: 미국은 지난 11월 20일 한국을 비롯한 8개국 제품(강판, 코일 등)에 대해 반덤핑 예비 판정을 내림. EU도 반덤핑 제소를 준비하고 있음
- 반도체: EU 집행위에서 반덤핑 제소를 기각하였으나(98년 8월),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(42%)되고 있고, 한국산 반도체를 가격 하락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있음에 따라 무역 마찰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
- 조선: EU 업계는 한국 업체가 환율 상승 효과 이상의 저가격으로 입찰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

② 슈퍼 301조 및 수입 개방: 철강, 농축산물, 의약품

- 미국은 슈퍼 301조의 부활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일본, 중국과 바나

3) WTO는 정부의 특정 기업 및 산업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

나 분쟁중인 EU를 겨냥하고 있어,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(PFCP)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. 그러나 철강, 의약품, 농축산물 등 통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압박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임

- EU 역시 자동차, 화장품, 주류, 농산물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 개방 확대를 요청할 것으로 보임

③ 정부의 보조금 지급: 철강, 반도체, 조선, 자동차

- 미국은 정부의 한보철강 지원을 문제삼고 있으며, 같은 맥락에서 빅딜에 따른 정부의 지원에 대해 보조금 시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. 특히 반도체 합병에 대해서는 미국 업계에서 반독점법(Anti-Trust Law)의 역외 적용을 주장함
- EU는 IMF의 구제금융이 산업 지원에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IMF의 보장 및 지속적 모니터링을 요구하고 있음

④ 신통상의제: 서비스, 지적재산권, 정부구매, 농산물, 경쟁정책, 부패방지, 환경, 투자, 전자상거래

- 대부분 신통상의제들에서 협상국가간 이견이 심하고, 99년 말에 뉴라운드로 이관될 가능성이 커 99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임. 그러나 신통상의제들이 가지는 성격상 사전 대비가 중요함

<주요 통상 현안 및 관련 산업>

구 분	관 련 산 업				
반덤핑 규제	- 미국 : 철강, 반도체, 전자 - EU : 철강, 조선, 반도체, 전자				
슈퍼 301조 및 시장 접근	- 미국 : 농축산물, 의약품, 철강, 스크린 쿼터, 정부 구매, 자동차 등 - EU : 자동차, 화장품, 주류, 농산물, 의약품 등				
빅딜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반독점법 역외적용</td> <td>- 미국 : 반도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조금</td> <td>- 미국 : 철강, 반도체 - EU : 조선, 철강, 반도체, 자동차</td> </tr> </table>	반독점법 역외적용	- 미국 : 반도체	보조금	- 미국 : 철강, 반도체 - EU : 조선, 철강, 반도체, 자동차
반독점법 역외적용	- 미국 : 반도체				
보조금	- 미국 : 철강, 반도체 - EU : 조선, 철강, 반도체, 자동차				
신통상의제	서비스, 지적재산권, 정부구매, 농산물 분야, 경쟁정책, 부패방지, 환경, 투자, 전자상거래 등				

□ 대응 과제

국제규범에 걸맞는 교역 관행과 제도의 개선, 다자간 협상에의 적극 참여, 민관합동의 사전 예방적 통상외교가 필요

-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적극적 통상 외교가 필요
 - 한국이 국제 규범에 맞는 교역 관행과 제도를 지향하고 있는 '개방된 통상국가'임을 적극 천명할 필요 있음
 - 쌍무 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통상 문제를 해결함
 - 마찰 소지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민관합동사절단 등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해명

- 개별 통상 현안에 대한 대응

① 반덤핑 규제

- 기존 반덤핑 제소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소명 자료의 철저한 준비
- 미국의 일몰 심사⁴⁾(Sunset Review, 99년 14개 품목)에 해당 업체, 업종별 단체가 적극 대응

② 보조금 문제

- 빅딜이 시장경제원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
- 빅딜이 세계적인 과잉공급능력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임을 주장

③ 슈퍼 301조 및 시장 개방

- 슈퍼 301조의 부활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, EU와 협력하여 WTO 차원에서 대응
- WTO 규범에 맞게끔 교역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여 통상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

(김 용 복 ybkim@hri.co.kr ☎724-4032)

4) WTO규정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규제 품목에 대해 규제가 개시된지 5년 이내에 재심을 통해 규제의 지속 여부를 결정